6 EU 집행위원회, 표준화 규정 개정안 제안

유럽연합집행위원회(EC)는 표준화 과정의 소요 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, 표준화 시스템 개혁 조치들을 담은 규정 개정안*을 제안('26.10)

* COM(2026)780 –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European standardisation

○ **(개요)** EU 내 표준 개발 지연으로 법률·정책 이행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규정 개정안으로, 제정 시 기존 규정*을 폐지·대체할 예정

* Regulation (EU) No 1025/2012

- 표준화 과정을 신속화하고, 표준 개발에서 중소기업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대표성을 높이는 한편, EU의 전략적 이익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표준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
- 유럽표준화기구*를 중심으로 한 기존 표준화 경로**를 유지하되, 표준 개발 지연을 막을 수 있도록 다른 적격 표준개발기구를 추가로 활용하거나 정식 표준 이전 단계에서도 적합성을 추정하는 등 대체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

* EU 및 EFTA 지역 내에서 통일된 표준을 제정해 유럽 단일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돕고 기술적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공식 기구로, 유럽표준화위원회(CEN),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(CENELEC),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(ETSI)의 3개 민간기관이 해당

** EC가 표준 개발 요청 → 유럽표준화기구가 기술적 내용 개발 → EC 평가 → EU 관보에 표준 인용 게재 → 해당 표준이 다루는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추정

- 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럽 표준화 시스템 개혁의 ▲추진 배경 ▲주요 조치 ▲목표 및 기대 효과 등으로 구성
- 현재는 규정 제안 단계로, 향후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심의·협의를 거친 후 채택되면 발효될 예정

○ **(배경)** EC는 ▲표준 개발의 중요성과 ▲기존 표준화 시스템의 과제를 인식하고, ▲표준화 규정 개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

- **(중요성)** 표준화는 상품·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, 상호운용성, 품질 및 소비자 신뢰를 뒷받침하는 EU 단일시장의 핵심 기반으로, 혁신과 신기술 도입 촉진 및 EU의 경쟁력·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산업 정책 수단으로 중요성 증대

※ EU는 표준화 체계에 조화표준*을 도입해 해당 표준을 준수한 제품·서비스는 관련 EU 법령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'적합성 추정'을 통해 기업의 규제 준수와 비용 절감을 지원

* harmonised standards: EU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규격(표준)으로, EC의 요청에 따라 유럽표준화기구에서 개발

- **(기존 시스템의 과제)** 그러나 유럽의 기존 표준화 시스템은 ▲표준 개발 지연 ▲이해관계자 참여 부족·불균형 ▲불확실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▲국제적인 영향력 약화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

※ 조화표준 수립 시 표준의 필요성 확인부터 공식화(EU 관보 게재)까지 평균 약 6.1년 소요

〈 기존 표준화 시스템의 주요 문제 〉

구분	주요 내용
표준 개발 지연	• 조화표준의 개발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탓에(평균 약 6년) EU 법령·정책 이행에 맞춰 표준이 마련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• 과거 전통적인 제품 규제 중심이었던 표준화 범위가 AI·사이버보안·친환경 기술 등 신흥 분야로 확대되는 가운데 표준 개발 지연은 해당 분야에서 EU의 선도적 지위 확보를 저해
이해관계자 참여 부족·불균형	• 표준 개발에서 중소기업, 스타트업·스케일업, 시민사회, 연구·혁신 주체의 참여가 충분하지 않아 다양한 경제·사회적 요구가 표준에 반영되지 못할 위험이 존재
불확실한 재정적 지속가능성	• '24년 3월 EU 사법재판소는 조화표준에 대한 무료 접근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, 이는 표준 판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부 표준화기구(CEN·CENELEC)에 재정적 과제를 제기
국제적 영향력 약화	• 전략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표준 설정에서 EU의 영향력이 감소

- **(개정 추진 경과)** EC는 기존 표준화 규정의 이행 성과를 사후평가하고,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정책 대안별 영향 평가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

○ **(주요 조치)** 유럽표준화기구가 표준 개발을 수행하는 기존의 민관 협력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표준 개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들을 도입할 것을 제안

- 주요 조치는 ▲표준 개발·평가·관보 게재 등 절차 신속화 ▲표준화 대안 경로 마련(개발 방식·주체 다변화, 표준 공백 보완 수단 도입) ▲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▲표준 무료 접근 보장 ▲국제 공조 ▲전문 센터 신설 등

〈 표준화 규정안의 주요 조치 〉

구분	주요 내용
표준 개발 절차 신속화	• 사전 협의·평가·관보 게재 일정을 구체화 – 제출된 표준·산출물은 6개월 내 평가하고, 긍정적인 평가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EU 관보에 인용 정보를 게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
표준 개발 방식·주체 다변화	• 긴급하거나 고도로 전문화된 수요가 발생하거나 기존 유럽표준화기구가 표준 개발 요청을 수락하지 못하는 상황 등 일정 조건 하에서는 기존의 표준화기구(CEN·CENELEC·ETSI)가 아닌 다른 표준 개발 기관도 표준화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– EC가 일정 조건을 충족한 표준개발기구를 지정해(지정 표준개발기구) 표준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 • 기존 표준화기구의 문서뿐만 아니라 외부 기술 사양(external technical specifications)도 표준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

구분	주요 내용
조화표준 공백 보완 수단 (중간 기술 사양, 공통규격) 도입	• 혁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가속화하기 위해 아직 정식 조화표준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 조화표준에 앞선 중간 단계인 '조화표준 산출물(harmonised standardisation deliverable, 일종의 중간 사양)'을 통해 기업이 적합성 추정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• 기존 표준화 경로에서 적절한 결과물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EC가 보완적 수단으로 EU 공통규격(common specification)을 직접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 – 이후 동일한 요구사항을 다루는 표준이 관보에 인용되면 그와 중복되는 공통규격은 폐지
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	• EU·회원국 차원의 표준화기구가 중소기업, 시민사회, 학계, 공공기관 등의 참여와 대표성을 보장하도록 관련 의무를 강화하고, 투명성·책임성 요건(이해관계 공개 등)을 도입
표준에 대한 무료 접근 보장	• EU 관보에 인용된 표준·표준화 산출물을 위한 전용 저장소(dedicated repositories) 등을 구축해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하고, 읽기·검색·인쇄·전자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의무화
국제 표준화 공조 강화	• 국제 표준화 과정에서 EU 차원의 조율을 강화해 세계무역기구(WTO)의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유럽의 이익을 보다 일관되게 반영할 것을 명시 • EU의 전략적 자산·이익·자율성·안보와 관련된 표준 개발 요청에 있어서는 표준 개발 참여 주체를 EU 내 법인 등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표준화 정책 조율 및 정합성 제고	• 표준화 정책의 조율 및 정합성 제고를 위해 EC 내에 유럽표준화전문센터(Centre of Excellence on European Standardisation) 설립을 제안 – 새로운 센터는 기존 표준화기구와의 협력, 지정 표준개발기구의 발굴·평가, 국제 표준화 공조 등을 수행

○ **(목표·기대 효과)** EC는 이러한 조치들로 표준화 과정의 평균 소요 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

- 유럽에서 표준 개발을 신속화하면 기업들의 규정 준수 비용은 연간 약 2억 9,500만 유로 절감될 것으로 추산

출처 : 유럽연합집행위원회 (2026.10.6.)
https://single-market-economy.ec.europa.eu/document/download/f61c3dca-d763-4d6d-b907-e17756e5c5b6_en?filename=COM_2026_780_1_EN_ACT_part1_v6.pdf